

윤 대통령 부친상 빈소 여야 만남...경색정국 완화?

尹, 이재명 대표 조문 사의 표명 강기정 시장·김영록 지사도 찾아

여야 지도부가 지난 15일 별세한 윤석열 대통령 부친 고 윤기중 교수 빈소를 찾았고,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도 16일 조문했다.

전날 고인의 학계 지인과 제자의 조문이 주로 이어진 가운데 여야 지도부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도 빈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비롯한 유족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의 조문을 받고, 직접 찾아와준 데 대해 사의를 표시했다.

여야 지도부가 빈소에서 모처럼 다 같이 마주 앉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던 시점에 부친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치 국면을 다소 늦추는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전날 정오께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비판하는 논평을 낸 뒤 오후에 추가 논평을 준비했다가 상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내지 않았다.

하루 뒤(16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렸던 '1특검(특별검사)-4대 국정조사' 촉구 대회도 순연하기로 했다.

발인을 하루 앞둔 이날도 여당인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은 물론 야당인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가 빈소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빈소 조우'가 잼버리 대회 파행을 둘러싼 책임 논란 등으로 한껏 가팔라진 갈등 정국을 타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권 관계자도 통화에서 "현안에 대한 여야 시각차를 고려할 때 교착 상태에 빠진 정국을 푸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은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1특검-4대 국정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면서 여권에 날을 세운 것도 이런 분석에 힘을 실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친 입관식에 참석한 뒤 다시 조문객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중에는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준비에 매진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한다.

한편 최근 본격 정치 행보에 나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전날 상가를 찾아 조문했고, 16일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의 조문도 이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미일 정상회의 ‘3국 방위 공동 구상’ 발족”

로이터통신 당국자 인용 보도

한미일이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서 기술과 방위 관련 일련의 이니셔티브(initiative·계획 또는 구상)들을 발족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6일 익명의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일련의 이니셔티브 내용과 관련, 로이터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한미일 정상들이 지역적 책임에 대한 상호 이해에 뜻을 같이하고, 위키시 가동할 '3국 핫라인' 구축 등에 합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의 취재에 응한 미국 정부 당국자는 “우리를 안보 영역에서 좀 더 가깝게 만들 일부 조치들을 기대한다”며 그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우리의 집단 안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한미일) 3자간 온전한 안보 프레임워크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일 것”이라며 “각국이 지역 안보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고, (정확 등의) 조율과 탄도 미사일 방어, 기술 등 새로운 영역에서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은 매우 실질적인 일로 여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미국은 일본, 한국과 공식적인 집단방위(한미, 미일동맹을 의미) 합의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의 국력 상승 및 중국의 의도와 관련한 점증하는 우려를 감안해 미국은 한일이 더 긴밀히 공조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로이터가 보도한 기술, 방위 등 관련 3국 이니셔티브는 한미일 3국 안보공조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한미, 미일은 각각 양자 군사동맹 관계를 맺고 있으나 역사 갈등 요소가 존재하는 한일 사이에는 동맹 관계 등이 부재하는 현실은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안보 공조에 한계로 작용해왔다.

한미일 3자 또는 한일 양자 군사동맹을 당장 구축하기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합의 가능한 3국 안보 공조의 기본 틀을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만든다는 것이 로이터 보도의 취지로 풀이된다.

백악관 참모로 바이든 행정부에 몸담았던 크리스토퍼 존스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사이에 이룬 일부 진전들을 제도화하고, 그것을 다시 뒤로 돌리거나 어렵도록 만들기 위해 한일 회해를 활용하려 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이와 함께 3국 정상회의에서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동성명은 대만과 관련한 중국의 ‘현상 변경’ 야심에 대한 우려를 담은 일부 표현을 포함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소개했다.

공동성명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표현을 담되, 구체적인 문구는 발표 직전까지 조율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문구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에 비춰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며, 연내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미중관계를 급격히 악화시킬 내용은 피할 것으로 통신은 전망했다.

/연합뉴스

국방부,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사건’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위원회 독립·공정성 확보 운영”

국방부가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결과를 보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에 넘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국방부는 16일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국방부 장관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 대령 측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14일 등기우편으로 국방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보낸 바 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기구다.

심의위원회는 5~2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때 구성됐던 심의위원회는 2년 임기가 만료돼 다시 위촉돼야 한다. 그런데 위원 선정 과정에 국방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

어 일각에선 공정하게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번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인 유재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 측은 법무관리관이 지난 8월1일 전화로 ‘죄명을 빼라, 혐의자 및 혐의사실을 빼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법무관리관이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국방부 검찰단에 낸 상태다.

다만 군 관계자는 “기피 신청은 ‘심의위원회’에 대해 하는 것이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감사원 “잼버리 중앙부처·지자체 철저 감사”

감사원이 16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예고했다.

감사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에서 “오늘부터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시감사(현장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감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감사국이 감사 준비를 맡는다.

하지만 실제 감사는 이번 대회와 연관된 기관 전반을 상대로 진행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특히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 준비·추진 상황을 모두 들여다볼 방침이다.

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회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히 감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관계기관 자료를 수집한 뒤 필요한 감사관 투입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감사에서는 1천억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도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 및 사업비로 잡힌 경우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전북도가 잼버리 유치를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 수단으로 활용한 의혹도 감사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감사원은 아울러 여가부와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부실 정황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연합뉴스

2023년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전라남도 지역상생 농촌일자리 지원사업

지원대상

- (구직자) 보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지 않은 관외 거주자
- (농 가) 농지 소재지가 보성군에 소재하고 경작 사실 확인이 가능한 영농인*
 - * 농업 경영체 등록서류, 임대차 계약서, 경작사실 확인서, 기타서류 등 제출
- (기업) 보성군 소재 농식품 제조가공 기업*
 - * 사업자등록증 제출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근로자	▶ 교통비(10천원), 숙박비(25천원), 상해보험 * 임금 외 별도 지급
농가	▶ 중식비(6천원), 간식비(3천원), 축진수당(3천원)
농산물 제조가공 기업	▶ 4대보험 실비

* 인건비 외 지원금 지급(익월 7일 이내 참여자 본인 계좌로 이체)

지원제한

- 농가, 구직자 중 한 명이라도 참여 신청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농작업 전 작업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작업자 명단을 제출하였어도 현장점검 시 농작업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동일 농지 및 기업에서 연속 30일 초과 근로의 경우 추가일 지급 제한
- 실업급여 수급자도 사업에 참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실업 인정신청 시 참여기간(근로 기간) 소득 신고를 하여야 함 (실업급여 수급 불가)

추진절차

| 알선 및 매칭은 상시 운영, 제한 횟수는 없음

- 참여 구직자

구직자 모집 신청·접수
참여신청서

→

근로 희망 일정
및 직무 상담

→

매칭

→

근로 및 지원
상해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월권키트 지급

→

지원금 지원
익월 7일 이내 계좌이체

- 참여 농가 및 기업

농가(기업) 모집 신청·접수
참여신청서

→

현장 답사
및 직무 상담

→

구인 신청

→

매칭

→

근로 및 지원
근로계약서 작성

→

지원금 지원
익월 7일 이내 계좌이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서류 접수기간 : '23. 8. 1. ~ 12. 31.(기간 중 수시 모집)

| 접수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접수
- 문의처 (보 성) 070-8832-9799 * 보성군 보성읍 봉화로 126, 2층 농촌일자리 사무소
(순 천) 061-750-7723 *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36 2층, 전남일자리플랫폼
(팩 스) 061-750-7790

(모집공고)

전라남도 일자리플랫폼